트럼프 "조만간 종전 선언"…다음달 판문점·9월 유엔 등 거론

한반도 평화 구축 가속…종전선언 언제 이뤄질까

문대통령도 남북미 정상회담 통해 추진 기대 환경 조성
북미 '평화체제 건설노력' 명시…종착지 '평화협정' 염두
북미 상호불가침 확약 등 후속조치 추진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거보(巨步)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4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성명 제2항에서 '북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동참한다'고 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공식화했다.

앙숙 관계인 북미가 전 세계 유일한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정상 차원에서 사실상 약속했다는 점은 한반도 비핵화를 뛰어넘어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봄'을 상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종착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 사항만 담겼을 뿐이지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미 간 상호불가침 확약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미국의 '대북 붕괴 시나리오'가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미국의 '본토 타격'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상호불가침 약속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단계의 한 축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시각이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점에 비춰 양측은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각종 조치 이행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정상이 평화구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단계로 거론되는 종전선언이 언제 어디서 단행될는지도 관심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종전선언 추진은 애초 싱가포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가 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비핵화 협상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본질인 데다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가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미국 측의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단 북미 정상이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종전선언을 할 날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 점에 비춰 일정 부분 성과를 낸 이 날 회담을 감안하면 종전선언이 추진될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우선 정전협정 65주년인 다음 달 27일이 거론된다. 상징적인 날짜라는 의미가 있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면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서의 상징성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상회담 장소로서의 효용성이 입증된 판문점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 장소로 판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도 언급된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인 곳에서 남북미 정상이 정전협정 세리머니를 하는 것 자체가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정상국가화'를 꿈꾸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무대 데뷔라는 또 다른 소득을 올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DC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식 직후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고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밤 싱가포르의 여러 명소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시내를 둘러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미국땅 언제 밟을까…백악관 회동 초미 관심

트럼프 "초청 할 것"…장소·시기 등 후속 비핵화 협상따라 유동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의 역사적 미국행(行)이 언제쯤, 어떻게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현실화하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미국 방문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여러 번 만날 것"이라며 후속 정상회담을 여러 번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회담후 기자회견에서는 "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고 회담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만일 북미 정상이 '제3의 중립무대'인 싱가포르를 넘어 미국에서 추가 회담을 한다면 장소 자체로 매우 큰 정치외교적 함의를 띤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향한 출발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자 지난 70년간 이어온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장소와 시기가 단연 초미의 관심사다. 장소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백악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기는 이번 회담의 결과와 그 이후 진행될 후속 비핵화 실무협상의 진전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두 사람이 '죽이 맞는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가을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속회담이 열리더라도 장소가 반드시 미국이 될지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당초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희망해온 만큼 후속회담 장소로도 평양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자체가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데다 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우는 데 따른 안전 우려 등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인 워싱턴과 평양 교차방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NYT "과감한 변화" 호평 속 디테일 부족 지적

외신들 잇단 논평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자평 속에 끝난 가운데 외신들은 양국간 공동성명에 대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다"고 호평하면서도 "디테일이 부족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큰 틀에선 양국이 수십년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위한 절차나 단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놀라운 도박을 통해 '불량국가'에 대한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정책을 뒤바꿔놓았다"면서 "그의 개인적 관심사 덕분에 군사적 대치 상황을 피하고 핵 관련 벼랑끝 전술의 사이클을 끊어냈다"고 평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합의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1972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 마오쩌둥 당시 주석과 만나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연 것과 비교하며 "만약 이를 통해 영속적인 긴장완화가 가능하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동성명이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